

# 공공부문 차량 5부제 강화 첫날...여전히 '복직'

### 지자체 직원 차량 단속에 인근 골목으로 몰려 민원인 주차 허용...통근버스·택시 이용 증가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 첫날인 25일, 광주 지자체 청사 주차장은 여전히 혼잡한 모습을 보였다.

지자체 직원들의 자가용 출입은 제한됐지만 민원인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주차 수요가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통근버스나 택시, 도보로 출근하는 공무원의 눈에 띄게 늘었다.

시행에 앞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기관은 게시판과 안내문자 등을 통해 5부제 시행을 집중 안내했다.

이날 광주 서구청사 정문에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승용차 5부제 시행'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됐고, 청원경찰들은 출근 시간대 연이어 들어오는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하며 단속에 나섰다. 민원인과

공무원을 구분하기 어려워 차량마다 일일이 신원을 확인하는 등 혼선도 일어났다.

5부제 시행을 미처 알지 못한 일부 공무원들은 청사 진입을 시도하다가 인근 골목으로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기존에는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이번 조치에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한 공무원이 "경차는 대상이 아닌 것 아니냐"고 묻자, 청원경찰은 "지침이 변경돼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민원인 차량은 확인 후 주차장 진입이 허용되면서 주차장은 빠르게 만차 상태가 됐다. 청원경찰은 "직원 차량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며 "일시적인 정체가 있었지만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동 사태 확산에 따른 정부의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 25일 오전 광주 서구청 민원인주차장에서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부터 주차된 위반 차량을 급히 이동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포착됐다. 일부 직원들은 청사 인근 골목이나 이면도로에 차량을 세우며 규제를 우회했고, 이로 인

해 주변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었다.

이날 직원 전용 셔틀버스에는 평소보다 많은 30여 명이 탑승했으며,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택시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직원도 늘었다.

오전 9시 이후에는 지하 직원 전용 주차장 단속도 이어졌다.

청원경찰은 끝자리 3·8번 차량을 확인한 뒤 이동 주차 안내문을 부착하고 차주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차주들은 "전날 주차한 차량인데 옮기지 못했다"거나 "당일 운행 차량만 단속하는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날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 1020개 공공기관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국공립학교 등을 포함해 약 2만여 기관이 대상이다.

승용차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와 요일을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주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제외 대상이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이번부터 포함됐으며, 장애인 차량과 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는 계속 제외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맑음	06:28	달림	11:35
맑음	18:49	달림	02:05



광주	☀️	6~21
목포	☀️	6~15
여수	☀️	8~19
순천	☀️	6~21
구례	☀️	5~22
광주	☀️	4~19
진도	☀️	7~21
진남	☀️	6~13
진도	☀️	4~22
진도	☀️	5~15

목포	미물(고)	07:48 / 19:42
	샘물(저)	13:01 / --:--
여수	미물(고)	02:27 / 14:27
	샘물(저)	08:45 / 21:02

## 흥기 들고 등교 중학생...교육청 "재발방지 총력"

### 광주교육청, 특수학급 현황 점검...피해 학생 지원책 마련

광주시교육청이 중학교에서 발생한 흥기 상해 사건과 관련해 특수학급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피해 학생 지원에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은 25일 이별 사건을 계기로 일반 학교 내 특수교육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피해 학생과 학교 구성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유·초·중·고 특수교육 대상자는 총 3545명으로, 이중 1468명은 특수학교에, 나머지 2077명은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이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로, 특수교육 대상자 4명이 1

개 학급에서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오가며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해당 중학교에 교육전문직을 파견해 사안 처리와 행정 절차 전반을 밀착 지원하고, 목격 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전문직과 교원이 병원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고, 학교와 학부모 간 소통 채널을 구축해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수교육 대상자인 피해 학생과 관련해서는 학부모 면담 과정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문 내용을 안내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서구, 경로당·방역 취약세대 점검 방역 25일 오전 광주 서구청방산경로당에서 서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방역대응팀원들이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광주 서구는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자 이용 시설과 위생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방역 취약 세대에 휴대용 방역 소독기와 비취벌레 및 모기 퇴치 약품을 활용해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광주 동구, 쓰레기 종량제봉투 5개월분 '재고 확보'

### 가격 인상 계획 없어...사재기 자제 등 당부

광주 동구는 중동 지역 분점 장기화로 인한 종량제봉투 원료 공급 불안에 대비하고자 제조업체와 협의를 통해 5개월분 재고를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동구는 확보된 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생산 일정과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제작업체를 다변화해 추가 발주를 고려하는 등 공급선 관리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동구의 종량제봉투 연간 소비량은 약 25만~50만장 규모다.

동구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 대해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량제

봉투가 물가가 부담되지 않도록 가격 관리 역시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과도한 선구매나 사재기가 발생할 경우 실제 공급 불안과 유통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가정과 사업장에서는 필요한 만큼만 계획적으로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는 생활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실천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음식물쓰레기 감량, 재



활용품 분리배출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 활동을 통해 생활폐기물 감량을 유도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 방안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유관기관 및 제조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종량제봉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실업급여 부정 수급했다가..."

만년필 ○...실업급여로 1200만원을 챙긴 부정수급자가 원금과 추가징수금, 벌금까지 더해 약 3배의 금액을 부담하게 될 처지에 놓여.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재판장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약 7개월간 12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

당시 재취업에 성공한 A씨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실을 광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실업 급여를 수령했다고.

앞서 이 사건은 검찰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한 뒤 형량을 높여.

재판부는 "부정 수급 기간이 비교적 길고, 근로소득과 유사한 수준의 급여를 동시에 수령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부정 수급액(1200만원)과 추가징수금(1000만원) 등 총 2200만원을 납부한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광주 '초등안심알리미' 확대 올해 3학년·특수학교도 지원

광주시교육청은 25일 올해 초등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초등학교 3학년과 특수학교 학생들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학생 기부에 부착된 전용 단말기가 학교 교문에 설치된 중계기를 통과할 때 등·하교 정보가 학부모에게 실시간 문자로 전송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제공했으나, 올해부터는 3학년과 특수학교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광주지역 초등학교 155개교 1~3학년 생과 특수학교 6개교 등 총 161개교 학생 2만4436명이다. 지난해 1만1593명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났다. 단말기 구매비와 이용료는 전액 무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단말기 보급에 그치지 않고 등·하교 정보가 누락 없이 전달되도록 통신 시스템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 "일제 강제동원 생존자 급감...역사 기록 시급"

일제강점기 국외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가 400명대 초반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한 자연 감소가 이어지면서, 피해자 세대가 빠르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사)일제강제동원생민모임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외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는 43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40명에서 1년 사이 206명이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부터 생존 피해자에게 매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당 수급자 수는 곧 생존 피해자 규모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성별로는 남성이 376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여성은 58명에 그쳤다. 이 통계에는 별도 법률로 지원 받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생존자 감소 추세는 뚜렷하다. 2011년 2만365명에 달했던 국외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는 2015년 9938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24년에는 904명으로 1000명 선이 무너졌다. 이후 불과 1년 만에 다시 절반 가까이 감소하며 올해 434명까지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8명, 전북 48명, 충남 42명, 전남 39명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는 14명으로 집계됐다. 세종과 제주 등 일부 지역은 1명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광복 이후 8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면 서 피해자 대부분이 90대 후반에서 100세에 이르는 초고령층이라는 점에서, 생존자 감소는 예견된 흐름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강제동원의 경험을 직접 증언할 수 있는 '당사자 세대'가 사실상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기억을 제도화할 '마지막 시기'라고 지적한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부정 움직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

수집과 기록화, 추모 공간 조성, 역사관 건립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제강제동원생민모임 관계자는 "생존자 감소는 예견된 흐름이지만, 역사적 기록을 확보하는 작업도 시급한 과제"라며 "강제동원이라는 역사적 비극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울 의료지원금 수급자 전년보다 206명 줄어 434명 '당사자 세대' 사실상 소멸단계...역사적 공백 우려